

‘禹 사태’에 새누리 계파 갈등 수면위로

“민심 이기는 장사 없다”

비주류·중진, 사퇴 한목소리

이정현 대표 국면 수습 주목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을 중심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만으로도 민심은 이미 우 수석의 사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계정석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라며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교만”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온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심만 보고 가야 하는데 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특히 내년 정치일정에 선거가 많은데 우리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전하고 받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우병우가 발탁한 고검장이 ‘우병우 수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금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당의 지금 모습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호남 민심 행보를 하는 것 등은 좋지만 지금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현안 등에 대해 조금 더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일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건전한 경쟁 관계이고, 쓴소리와 단소리를 다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주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가 발근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신이 쓴 소리를 하나, 얘기를 제대로 하나’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다”면서 “벼와 과일이 익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해와 구름, 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보이는 해와 구름, 비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다”며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올린다”고 반박했다. 당내 관계자는 “전대 이후 일순 조용했던 당내 계파갈등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이라며 “이 대표가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대선 행보 기지개

대전 방문 JP 냉면 회동 주목...27·28일 광주, 30일 부산행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 대전을 찾아 내년 대선을 향한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기 시작했다.

추석 전 광주·전남과 부산을 방문하기 앞서 지지세가 약한 충청권을 먼저 찾아 중원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미리 공을 들이는 것이다. 최근 경기 성남과 강원 원주에서 강연 등의 지역일정을 소화했지만 이번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방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중앙시장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았지만 지도부와 함께 전국 지방의원 연석회의와 충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잇따라 참여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충청에서 동고동락한 출마자들이 지역위원장을 많이 맡아 이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의당을 선택해준 지방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대표적 사퇴 이후 떨어진 당내 지지세를 견고히 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지역조직을 다져놓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 성남에서 강연한 뒤 경기지역 위원장들을 만난 데 이어 20일에는 서울 수락산에서 서울지역 위원장 20여 명과 함께 산행



안 전 대표 측은 충청권 공략 차원에서 이번 대전 방문 일정을 세심하게 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추석 전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함께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냉면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일찌감치 충청 민심에 다가가는 데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현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국가가 위기상황인데 현안에 대해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당 충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절반의 이 전밖에 이루지 못했다”며 “개헌 사항인 만큼 추후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행정수도 이전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외로 나서는 더민주 초선들

오늘 ‘세월호 특조위 연장’ 촉구 성명...유족들과 거리 행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족들과 함께 행진하기로 했다.

초선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모였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세월호 특위 연장 문제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우 수석은 이미 국민이 해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다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단식 장소까지 참석의원 전원이 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까지만 해도 쏟아졌던 강경 목소리가 수그러든 것은 강경파와 충도파가 혼재된 당내 초선의원 분포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록 수위가 낮아진 것

지만 초선의원들의 집단행동이 ‘장외투쟁’으로 왜곡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아담에 만들어준 다수를 갖고 국회 내에서 할 일을 일단 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파이를 키워가는 초선의원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8·27 전당대회 이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 초선의원은 57명으로 전체 121명의 절반에 가까운 47%나 된다. 4·13 총선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에서 ‘초선의 힘이’ 입증됐듯이 이들이 한목소리를 낼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당내 시각이다. 이들 57명은 엄연히 강연으로 나누어져 있어 당내 갈등의 또다른 진원지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후보자 등록 후엔 사퇴 금지

선관위,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 오늘 국회 제출

공약 비용 추계제 도입·투표 인증샷 게시 허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24일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 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지구당)을 설치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그 대표자를 선출해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

보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 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팔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

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특히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직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단, 항우회·총친회·동창회 등 자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이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등의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의견은 앞으로 국회 안건정당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